 <b>국토교통부</b>		<h1>보도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<b>보다나온 정부</b>	
		배포일시	2020. 2. 19(수) 총 17매(본문3, 별첨 14)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이성훈, 서기관 서정관 ☎ (044) 201-3994		
보도일시		2020 2월 20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20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## 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‘화물차 교통안전’ 확보한다 과적단속원에 단속권한 확대…상승위반차량 심야 통행료 할인제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화물차 안전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안전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‘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’을 2월 20일(목),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국무총리 주재)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·확정하였다.
- 사업용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017년 255명에서 2019년 208명(잠정 집계)으로 최근 감소하였지만, 여전히 화물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.
  -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화물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.
-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< ① 점검 및 단속 강화 >
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, 적재화물 이탈 방지 등 안전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단속기관인 지자체에 전담인력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,

- 상시 과적 단속업무를 수행 하는 도로 과적단속원에게 화물자동차법 등 타법 안전규정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한다.
  - 국토부, 경찰,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**합동단속**은 횡수를 늘리고 테마별 집중단속을 선정하는 등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.
  - 아울러 과적,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**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**은 현재 화물차에 적용 중인 **고속도로 심야할인\***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.
- \* 심야시간(21시~06시) 이용율 70% 이상 시 50% 할인, 이용율 70~20%는 30% 할인

### < ② 화물차운전자의 운전문화 개선 >

- 장시간·저운임 운행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**안전운임제**가 화물 운송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운전자의 과로·과속 운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급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.
- 화물자동차법령의 ‘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휴식’ 의무 규정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자 생리 등을 고려해 **적정 운전·휴식시간**을 재검토한다.

### < ③ 안전장치 등을 통한 차량안전강화 >



- **운행기록의 제출을 의무화**하고 원활한 운행기록 제출을 위해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춘 **운행기록장치**의 보급도 확대한다.
- 수집된 정보는 맞춤형 **안전교육** 및 운전습관 개선, 위험운행 지역 **교통시설 개선** 등 안전정책에 적극 **활용**한다.
- **최고속도제한장치**와 **차로이탈경고장치**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이들 장치에 대한 **불법 해제·조작**에 대한 **검사**와 **제재**를 강화한다.

### < ④ 적재안전 확보 >

- 화물고정 불량 시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형사 처벌도 신설한다.
- 화물 종류별로 보다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재 방법을 규정한 적재물 안전관리 지침도 마련한다.
-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의 적재불량 단속정보를 화물자동차법 집행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 공유하여 벌점, 범칙금과 함께 운행정지 벌칙도 같이 부과한다.

< ⑤ 안전의식 확산 >

- 안전교육 실태 관리를 강화하고,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안전 캠페인과 안전 슬로건 홍보, 안전운전자에 대한 포상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.
-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“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- “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의 무게만큼 안전 책임도 무거움을 인식하고 안전대책 추진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저표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서정관 서기관(☎ 044-201-39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